

# 전남 지자체 부당수급 전기차 보조금 관리 소홀 적발

## 감사원, 보조금 회수 누락 점검 결과 전남 미회수율 56% 전국 2위 불명예 의무 운행 미준수 2억2천만원만 회수

전남 22개 시·군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자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II'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1만348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회수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의무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전국 전기차 1천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137만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은 73억6천771만원으로 금액 기준 미회수율은 36.3%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가에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이 기간 보조금 회수 대상 75대 가운데 실제 환수한 차량은 38대(50%)에 그쳤다. 회수 대상 보조금 또한 5억483만원 가운데 2억2천103만원만 회수, 미회수된 금액은 2억8천379만원으로 미회수율이 56.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보조금 미회수율(36.3%)을 19.9%나 웃도는 수치다. 전남의 미회수율은 강원도(72.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광주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보조금 회수 대상 전기차 37대 가운데 33대(89%)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했다. 회수 대상 보조금 2억3천122만원 가운데 미회수된 금액은 2천736만원으로 미회수율은 11.8%에 불과하며 울산(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감사원은 이처럼 의무운행 기간을 미충족한 전기차가 보조금 환수 없이 말소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환수 업무 담당자와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업무 담당자가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의 의무운행 기간 미충족 전기차 76대에 대해 보조금 47억원 가량을 회수하고도 국가에 15억5천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등 국비 반납 관리에 소홀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현황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조금 회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양시원 기자

## 광주 자치구의원 정수 73명으로 4명 ↑

### 서·남·북·광산구의회 1명씩 증원 중대선거구 '광산 라'는 정수 유지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69명에서 73명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기존 69명에서 73명으로 4명 늘었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60명으로 3명 늘었고, 비례대표 의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했다. 자치구별 의원정수의 경우 동구는 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서구는 13명에서 14명으로, 남구는 11명에서 12명으로, 광산구는 18명에서 19명으로 각각 1명씩 늘었다. 북구는 비례대표 의원 증가로 전체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1명으로 확대됐다. /변은진기자

이에 따라 서구 다 선거구가 기존 2인 선출에서 3인 선출로, 남구 나 선거구가 3인 선출에서 4인 선출 구조로 변경됐다. 2022년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해 의원정수를 1명 증원했던 광산구 라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도 의원정수 변동 없이 3명을 선출한다. 북구는 시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거구 명칭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북구 라선거구는 북구 마선거구로, 북구 마선거구는 북구 라선거구로, 북구 바선거구는 북구 마선거구로 바뀐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3일 광주시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비율, 동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정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가 지난 24일 의결했다. /변은진기자

## 기본소득 신지혜 "1호 공약 '광산구 산업혁신'"

### 이익공유제 도입 등 4대 비전 제시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30일 1호 공약으로 '광산구 산업혁신'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 산업혁신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이 광주와 광산구 발전의 적기"라며 "광주 제조업의 70%를 책임지는 광산구가 AI 대전환에 발맞춘 미래 전략으로 고용위기 극복과 산업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의 일자리를 떠받치는 제조업의 5곳 중 4곳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광주시민과 전문가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 육성을 꼽을 만큼 산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4대 비전으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 군공항 부지 AI 거점 활용, 미래차·반도체 산업혁신, 산업전환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변은진기자



광주 핵심 전략산업 투자협약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26년 광주 핵심 전략산업 투자협약'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김대중 예비후보 "국외 출장중 한차례 카지노 방문"

### "불법 도박 안해... 처신 부적절" 사과 학생 생애 성장중심 시스템 등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수장 불법 도박과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30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스톱도 할 줄 모르고 불법 도박이나 불법 도박장을 기본적으로 없다"며 "(교육 수장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국외 출장 중 일과 이후 일행들과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호텔 카지노를 들른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횡수로 보면 1번 정도 갔던 것 같다"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도박판에 기웃거린다"고 물어가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선거관이지만 최소한의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호주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이 1천100만원으로 부풀려졌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호주 왕복 2회와 국내선 4회 이동이 포함된 총액으로 항공료 문제는 교육감이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무로 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에서 벗어났고 행정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반환하고 원인을 살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항공료 730여만원을 자비로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몇 번의 시험과 선택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학생 삶을 따라 끊임없이 성장을 지원해 '기회가 넘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 생애 성장중심 교육 ▲기본과 재능을 함께 키우는 균형성장 교육 ▲지역·현장 중심 선순환 교육생태계 구축 등 3개 방향을 제시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인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